



노동조합과 지자체의 올바른 관계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옹호와 투쟁 대상으로서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선거가 끝났다. 집권당은 승리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야당은 참패했다고 풀죽은 모습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려워지기만 하는 살림살이와 정책도 지조도 없는 정치꾼들의 밥그릇 팜박질에 식상한 나머지 선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투표율이 겨우 절반을 넘어서서 역사상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선거결과 는 이 나라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분할을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만으로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이번 선거결과로 지방자치의 참 뜻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이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제도이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

드시 키워야 할 정치 행정제도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참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로서는 스스로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터전이다.

한편 지자체는 세금, 공공요금, 주택, 환경, 교육, 도시계획, 교통, 복지문화, 사회보장문제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생활과 권리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는 노동조합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자칫 지역주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의사나 요구를 무시하고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아 지역주민 보다는 지배권력의 편에 설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배 개입을 배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키워야 할 제도이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지자체에 많이 보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대다수인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운동을 조직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까지 바꾸게 한 지자체 재정지원의 모순

이번 선거에서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맞서 어렵사리 선거활동을 했다. 돈도 권력도 없이 평소에는 직장에 다니느라 노조활동을 하느라 지역조직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데다 고용불안과 부당노동행위를 이겨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거를 치루어 냈다. 그 결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95년 선거에서 한명도 없었던 단체장에 4명(한국노총 1명, 민주노총·국민승리21, 3명)이 진출하였으며, 광역의원에는 19명(한국노총 17명, 민주노총·국민승리 21, 2명)이 당선되었다. 또 기초의원에는 82명의 후보자 가운데 40명(한국노총 23명, 민주노총·국민승리21, 17명)을 진출시켰다.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냄으로써 앞으로의 정치세력화에 좋은 전망을 갖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활동은 아직은 매우 미약하다. 먼저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자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노동조합 출신 단체장은 전체 232명의 1.72%, 광역의회 의원은 616명의 3.08%(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은 3,490명의 1.15%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하여 지역운동을 조직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물론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어 지역조직이 매우 약하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조직은 대부분 단위노조의 쟁의를 지원하거나 노조끼리의-그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연대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 요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기업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함으로써 지역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 행정관청으로부터 많은 법률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설립·변경·해산과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관계 지원자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규약·임원변경 및 조합원수를 통보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해 대화소집권자 지명,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해산명령, 단체협약중 위법내용 시정명령, 지역적 구속력 결정, 쟁의행위 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따위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지자체의 본래의 뜻이나 노동조합운동의 목표에 비추어 볼때 여러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특히 지역조직은 지자체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며 이 관계는 법률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과거에 지방행정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괴롭힌 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해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노동행정을 노동부에서 모두 처리하라고 오랜 동안 요구해 왔었다. 그 결과로 97년 3월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모든 노동행정을 노동부에 집중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이 바뀐 지 1년도 안돼서 노동조합측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행정을 다시 지방행정관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조합측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이유의 핵심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문제이었다. 노동관계법이 바뀌어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없어져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주로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베풀어왔던 재정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없어 졌는데 무슨 근거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매우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내 조직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는데 큰 몫을 했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끊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행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이른바 '노동행정의 일원화'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지금까지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 또는 도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에게 노동복지회관을 지어 노조사무실로 쓰게 하고 있고 간부교육, 세미나, 노동절행사비 따위를 지원하였으며 심지어는 노조간부 해외연수까지 연례행사로 치르는 곳도 있었다. 민주노조진영은 이러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자주성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하여 비판했었다. 그런데 그 민주노조

진영의 몇몇 지역조직조차도 금액은 적지만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만큼 상황이 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조직의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조직은 지역내 조직의 요구를 해결하기는 커녕 회의비나 직원 인건비 같은 조직유지의 기본조건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행정기관에게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원칙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좀 갖다 쓰면 어떡냐는 것이다. 자주성을 잃지 않고 떳떳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현실로는 그럴듯한 얘기다. 주민사업을 핑계로 세금



95년 선거에서 찬양도 없었던 단체장에 노동계에서 4명이 진출하였다. 사진은 군포시당에 당선된 김윤주 노총경기총부지역 지부장을 지음 방명한 한국노총 지도부.

을 마구 속내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판에 노동조합이 지자체 돈으로 주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벌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위험스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이며 때로는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섭과 투쟁의 상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쓴다는 것

은 자주성과 투쟁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노동조합으로서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또 '세금 냈으니 갖다 쓴다'는 얘기는 사용자단체와 같은 다른 집단들도 같은 논리로 지자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이유만으로 지자체로부터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을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에 걸맞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그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합원의 광범한 토론과 조직의 결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자체의 확실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노동통제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지자체 역시 정치권력의 하나임에 틀림없고 정치권력은 재정지원을 통해 각 계층이나 집단을 끌어들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가 제공한 복지시설은 특정한 조직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노조 또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은 단지 노조사무실이나 교육, 소비조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탁아소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용도가 넓혀져야 한다.

셋째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의 원리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자체와 같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키고 향상시키며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신뢰도를 높여 세력을 키워 가는 것이다. 그러하려면 모든 노동조합들이 지역활동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중앙 또는 지역으로 조직력과 재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조직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운동을 앞장서 펼쳐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료 1

<국민승리21> 지방선거 논평

파탄 난 보수정치! 싹트는 노동자·진보정치!!
 <국민승리21> 제3정치세력으로 등장!!!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부패 보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와 기성 정치의 파탄, 그리고 힘차게 싹트고 있는 노동자 진보정치의 등장을 보여준다.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조장과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들추는 삼류 정치로 일관하였다. 당선 상황을 보여주는 전국 지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맹주 정당들의 봉토를 표현하는 색깔로 다시금 덧칠되었을 뿐이다.

나라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52%에 불과한 투표율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낮은 투표율이, 흔히 이야기되듯이 경제난 탓일 뿐인가? 우리는, 경제난과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핑계 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기성 정치권 거부를 호도하려는 보수 정치권의 흑세무민이라 규정한다.

우리 국민은, 이념과 정책 없이 지역 감정이나 기대고, 국민 대다수의 민생은 외면한 채 보스에 대한 출서기로 출세하려는 보수 정객들을 준엄히 심판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승리21·민주노총」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15~20%나 상회하는 것으로 분명히 증명된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후보가 나서 정책대결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예외 없이 높은 투표율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웅변하는가? 부패 보수 정치의 파탄과 노동자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다.

우리 후보들은 모두 '주민 참여에 의한 자치의 혁신,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였다. 당선자들 뿐 아니라, 낙선자들도 부패 중앙 정치의 지역판에 불과한 현행 자치제도를 진정한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풀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 후보들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조승수, 김창현씨가 단체장으로 당선된 것은 우리 후보들의 이러한 자세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

지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투자기관과 연구직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의 기초의원 출마자 전원이 당선된 것 역시 마찬가지 경우이다. 이것은 고용 실업 문제에 대해 생색내기 정책 뿐인 보수 정치권이 아니라, 노동자 편에 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펼치는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만이 실업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국민의 평가이다.

이제 「국민승리21」은, 국민신당을 누르고 제3정치세력이 되었다. 「국민승리21」은 선거 결과에서 보여진 노동자와 국민들의 지지를 진보정당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겹쳐히 받아들인다.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진보정당을 조속히 창당하여 이념 정책 대결로 정치권 전반을 개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봉사해 나갈 것이다.

1998년 6월 5일

자료 2

한국노총 6.5 지지체 선거 평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3명
당선을 52.6%, 노조 정치활동 새로운 장 개척!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한국노총은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78명의 후보 가운데 군포시장의 김윤주 후보(현 한국노총 중부지역 지부장)를 당선시킨 것을 비롯하여 총 4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당선율은 52.6%로 91년의 28.4%, 95년의 38.9%와 비교할 때 노동자후보의 정치적 진출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명을 당선시켰으며, 광역의원후보로 34명이 출마하여 인천시의원에 손석태 경기은행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17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한 기초의원후보로는 42명이 출마하여 강서구의원으로 송영섭 안진교통노조위원장 등 23명을 당선시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78명의 후보로 '한국노총 지자체후보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선거참여 활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당면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정책선거·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는 아직까지 금권 흑색 비방이 잔존하는 우리의 선거문화에 참신한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노총은 주목할 만한 몇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구미지역에서 무소속으로 6명이 출마하여 5명이 당선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구도가 기승을 떨친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미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계 후보를 맨손으로 일구어낸 성과라는 것에서 향후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순수한 현장노동자의 당선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위주와 지연·혈연위주의 선거풍토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특히 군포시장에 당선된 김윤주 후보는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범양냉방이라는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 온 현장노동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앞으로 학력과 경력 및 금력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스스로 약자의 입장에서 일궈낸 인간승리의 표본이 될 것이다.

세째, 이번 선거는 향후 노동조합이 정치무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의 제약과 자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각급 선거에 진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노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급속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일로 매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시 한번 노총 후보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전체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 노총의 정치활동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1998년 6월 5일

6.4 지방선거 노동계후보 당선자명단

1) 기초단체장

지 역	이 름	소 속	현 직 책
울산시 북구청장	조승수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울산집행위원장
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울산연합 지도위원
경남 남해군수	김두관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남해군수
경기도 군포시장	김윤주	한국노총	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장

2) 광역위원

지 역	이 름	소 속	현 직 책
서울시 비례	김성태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위원장
부산시 비례	김진수	한국노총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대구시 비례	이상기	한국노총	택시노련 대구지부장
인천시 부평구4	손석태	한국노총	경기은행노조 위원장
인천시 비례	한창석	한국노총	한국노총 복지본부장
광주시 비례	이형석	한국노총	한국노총 광주본부 부의장
대전시 대덕구2	여운상	한국노총	화학노련 대전지방본부장
울산시 동구3	조규대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중공업노조 교육위원
울산시 북구2	이상범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자동차노조 2대위원장
경기도 비례	황윤진	한국노총	노총경기도본부 사무처장
전북도 김제2	김상복	한국노총	전 동진농지개발조합위원장
전북도 비례	김영길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전남도 여천2	박동현	한국노총	화학노련 전남본부 의장
전남도 화순1	임호경	한국노총	광산노련 부위원장
전남도 비례	이신원	한국노총	노총 전남본부 의장
경북도 구미2	김정수	한국노총	노총 구미지부장
경북도 비례	이철우	한국노총	노총 경북본부 의장
강원도 태백시	손석암	한국노총	전 석탄공사노조위원장
강원도 비례	인현상	한국노총	노총 춘천지부장

3) 기초의원

지역	이름	소속	현직책
서울시 강남 신사	윤정희	한국노총	전 한국노총 국제부차장
서울시 관악	김혜경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여성위원장
서울시 신림9동	유정희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살기좋은 신림9동 만들기 대표
서울시 방화3동	송영섭	한국노총	안진교통노조 위원장
서울시 잠실5동	이한숙	한국노총	전 체신노조 여성국장
대전시 대덕	심준홍	한국노총	대전충남향운노조 총무부장
대전시 유성구	신현관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과기노조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대전시 온천2동	이상재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과기노조 지역사업위원장
대전시 진민동	한상호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과지노조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울산시 남구	김진석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울산연합 남구사업위원장
울산시 동구	장두철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미포조선노조 3대위원장
울산시 동구	이준일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금강개발노조 지부장
울산시 동구	이재현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엔진노조 3대위원장
울산시 북구	진한걸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자동차노조 초대부위원장
울산시 북구	윤종오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현대자동차노조 6대 조직실장
울산시 중구	이재덕	한국노총	삼성정밀화학노조 조합원
울산시 장생포	최형문	한국노총	유공노조 조합원
경기도 동두천	동두천	한국노총	주한미국노조 동두천 부위원장
경기도 고양	김범수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고양시민회
경기도 군포	송재영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시민노동인권회과 소장
경기도 부천	이재영	한국노총	노총 부천상담소장
경기도 수원	김현철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수원시 의원
경기도 안산	이하연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안산노동상담소장
경기도 이천	김학인	한국노총	노총 이천여주지부 사무국장
충북도 청주	조남수	한국노총	충북향운노조 위원장
전북도 군산	정하룡	한국노총	서부향운노조 공소지부
전북도 남원	장복수	한국노총	체신노조 남원지부 주생분회
전북도 전주	최동남	한국노총	노총 전주완주 지부장
전남도 영광	김용현	한국노총	전력노조 영광원지력 지부
경북도 구미	김영호	한국노총	태영전기노조 위원장
경북도 문경	김호건	한국노총	전 석공노조 위원장
경북도 구미	마창오	한국노총	전 노총 구미지부장
경북도 구미	연규섭	한국노총	전 LG전자노조 구미지부
경북도 구미	오병호	한국노총	전 오리온전기노조 위원장
경북도 구미	임경만	한국노총	전 오리온전기노조 대의원
경남도 거제	이행규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전 대우조선노조 수석부위원장
경남도 진주	정한웅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카톨릭 상담소 실장
강원도 강릉	김영기	한국노총	강릉향운노조 위원장
강원도 정선	이대춘	한국노총	노총 영평정 상담소장
강원도 태백	김영규	한국노총	전 석공노조 장성광업소 노조원
경기도 과천	최경송	민주노총 · 국민승리21	청년생태포럼